

광남시론

박찬용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정치학 박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날 1일 국군의날 행사 연설에서 군군간 한미동맹 기반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계 각지에서 협력과 공동번영의 동력은 약해지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 도생 시대라며 자강을 강조했다. 미국과의 합의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을 이루어낸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군사적 능력이 입증되고 한국의 북한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등의 한반도 역대 안보환경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뜻밖에도 지금까지 신중했던 미국이 최근에는 반한 태세로 돌아섰다.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국방부 장관이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 대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한국은 전투에서 믿음직한 파트너의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2주전 미국은 주한미군에 ‘하늘의 암살자’ MQ9 리퍼부대를 창설하고, 최신에 정보, 감시, 정찰자산 아테네-R을 배치했으며 미국판 아이언돔과 5세대 스텔스전투기 F-35A 상시 배치에 나섰다. 최근 경우 APEC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는 등 미국이 예상과 다르게 선제적으로 한국의 전작권 전환조건을 채워가는 모양새다.

한편, 미국과의 전시작전통제권 역사를 알아보면, 1950년 7월 이승만 대통령이 6·25전쟁 중에 대한민국 국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선언의 시사점

군의 작전지휘권을 맥아더(Douglas MacArthur) 극동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함으로써 이때부터 유엔군 사령관이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이때 유엔군사령관은 주한 미군사령관을 겸임했으며 당시는 한국군이 지휘계통에 개입할 여지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미군이 작전지휘권을 행사했다. 이후 1979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이 기구의 부사령관 겸 지상구성군사령관이 한국군 대장이 임명되어 어느정도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후 노태우 대통령이 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미국 정부와 협상을 했고 후임인 김영삼 정권 때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로 환수되었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년 10월에는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한국군의 능력과 주변 안보환경 등 조건이 충족되어야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도록 하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재연기되었다. 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전작권을 조기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은 정치권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기지만 자신들의 집권시기에 다루기는 상당히 난감해서 계속 다음정부로 떠넘기는 식이 반복되는 형국이었다. 그런데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더라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면 미군의 참전은 국제조약상 당연히 보장 되어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전시작전통제권은 엄연히 다르다. 한국이 북한에 비해 군사적으로 충분히 우위에 있지 못하던 1980년대까지는 전작권이 미국에 있는 것이 더 합리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2025년 현재, 한국이 군사력으로 세계 5위안에 들어 있는 만큼 북한

에게 압도적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는 이로인한 이득보다 손해가 더 막대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향후 한국군이 지휘하는 연합사가 되어 한국군이 사령관을, 미 군군이 부사령관을 맡도록 한미연합사를 유지하면 한국의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가 될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의 미군 전체가 한국군 장성의 지휘아래에 들어간다는 점이 불쾌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재의 한미연합사가 그렇듯, 한국군 사령관이 미군 부사령관을 일방적으로 무시하여 지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난 2017년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연합방위 체제에서의 한국군 주도원칙은 인정하기로 했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양국간 협력지속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2024년 주한미군 사령관 ‘폴 라케머라’(Paul LaCamera)는 전시작전권 전환이 ‘완료위한 궤도단계 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APEC에서 트럼프가 직접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트럼프는 한미군사동맹은 어느때보다 강력해졌으며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이다. 핵추진잠수함은 한국의 전시작전권 전환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관세협상 카드중의 하나로 검토했고 미국이 관세협상 조건으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일부 수용하는 대신 전작권전환으로 자주국방이라는 한국의 숙원사업도 해결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문제를 하루아침에 똑딱 해치우기 보다는 국가안보의 중장기 현안으로 분류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기고

김동관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



광주 ‘지방의제21’ 30주년과 실천운동 톺아보기

하는 파트너쉽과 거버넌스를 존중하는 21세기형 참여자치운동이다.

광주는 유엔 리우 선언과 실천지침서인 의제21을 토대로 1995년 ‘푸른광주21협의회’를 설립해 시민, 기업, 행정 이 함께 힘을 모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행동을 시작했다. 1996년 ‘광주환경선언’으로 그 실천을 다짐하고 1997년을 시작으로 매 5년 단위로 의제를 수립·실현하고, 모니터링과 평가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의견과 논의가 의제 속에 포함돼 운영되는 효과적인 시스템이 마련됐다.

2012년 유엔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UNCSD, RIO+20)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중심의 논의에서 경제성장, 사회통합, 환경보존의 조화와 사회경제 시스템의 전반적 향상을 추구하는 균형발전의 개념으로 성장했다. 이에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169개의 세부지표는 2030년까지 ‘누구도 소외하지 않는다(No One Left Behind)’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전 인류가 행동할 업그레이드 된 과제를 제시한다.

이제 발맞춰 2016년 ‘푸른광주21협의회’는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에만 국한된 의제의 영역을 경제, 사회, 문화 등 지속가능발전의 전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지역의 시민실천운동으로 이행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지방의제21’ 운동의 중심역할을 해 온 협의회도 광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광주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초점을 두어 의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제6차 광주의제(2022~2026)는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2020)의 제정에 따라 작성됐다. 6차의제는 광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액션플랜으로써 시대적 요구에 따라 ‘기후위기시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광주만들기’하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시민 참여 재생에너지 전환, 생물다양성 보전과 회복, 책임있는 생산과 친환경적 소비,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환, 불평등 감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문화다양성 존중과 인권감수성 증진,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만들기 총 8가지 의제로 구성됐다.

각각의 의제마다 시민사회단체, 마을공동체, 기업, 학교, 유관기관, 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와 참여단체가 매년 해당 의제를 실천하고 있다. 이렇듯 의제운동은 광주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의 실천활동으로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정책 내재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광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적극적 이행을 위해 민관의 소통·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방위적 지속가능발전 운동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지방의제21’ 운동을 시작한지 30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다. 광주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지방의제21’ 운동을 시작했고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가장 모범적인 의제실천활동을 해왔다. 3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는 지역 의제운동의 역사를 계속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난 30여년간 광주 ‘지방의제21’운동을 동행한 지역의 든든한 시민사회단체 및 광주공동체와 그 역사를 함께 정리하고, ‘온고지신’의 정신과 ‘줄타동시’의 자세로 광주공동체의 ‘포스트 SDGs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취재수첩

지역이 중심이 되는 ‘K-콘텐츠’

이승홍

경제부 부장



K-POP은 더 이상 음악이 아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문화 플랫폼이자 기술과 산업이 융합된 생태계다. 이 흐름 속에서 광주의 콘텐츠 기업들이 AI와 캐릭터 IP를 앞세워 K-POP 산업의 새로운 확장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최근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문을 연 ‘덕 네스트 아이돌’ 팝업스토어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광주기업 밀레

니얼웍스광주팀이 AI 기술로 구현한 ‘아이돌 연습생 체험공간’으로 방문객은 증강현실(AR) 게임과 AI 포토카드를 통해 ‘나도 아이돌이 되는 경험’을 즐긴다.

광주 캐릭터 IP ‘두다다쿵’의 도전도 눈길을 끈다. 글로벌 아티스트 강다니엘과 손잡고 캠퍼용품, 뷰티제품 등 실생활형 굿즈를 선보였다. 단순한 팬상품을 넘어 일상 속 브랜드로 자리잡으며, 키즈층을 넘어 MZ세대까지 고객층을 넓혔다. 일부 제품은 조기 품절됐고, 온라인몰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했다. 지역 기업의 한계로 여겨졌던 브랜드 영향력이 전국 단위로 확장된 셈이다.

서울·수도권 중심의 K-콘텐츠 시장에서 이런 성과를 내는 건 쉽지 않다. 그 뒤에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의 체계적인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이 있었다.

이 사업은 지역에서 발굴한 IP를 기획·제작·유통으로 이어주는 전주기 지원 구조로,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제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한다. 단순한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지역 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플랫폼이다.

콘텐츠 산업은 창의력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기술과 자본, 제도의 뒷받침이 더해질 때 산업으로 성장한다. 광주 기업들의 사례는 K-POP의 ‘지역 확장’이자, 수도권 중심의 문화산업에 균형을 세우려는 움직임이다. 창의력의 무계중심이 점차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K-POP이 세계를 무대로 성장했듯, 지역이 중심이 되는 K-콘텐츠의 시대도 머지않았다. 지역의 기술과 문화가 만나면 새로운 파급력이 생긴다. 광주 기업들의 도전은 그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다. 지역 문화산업이 기술과 정책을 통해 다시 도약하길 기대한다.

사설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예타 통과 절실

‘생태계의 보고’ 여자만 일대를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제10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여자만 국가해양생태조성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확정할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내년말까지 기재부의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 평가하는 예타조사를 마친 뒤 타당성이 인정돼 최종 통과될 경우 2027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작은 지구, 여자만! 자연과 사람이 지켜낸 공존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될 이 사업은 2031년까지 5년간 총 1697억원을 투입, 보성과 순천 일대에 해양 생물 보전과 생태·관광 기능을 아우르는 대규모 국가 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공원 내에는 해양보호구역 생태계 통합관리센터 구축, 갯벌 복원 및 철새 서식지 확충, 염습지·멸종위기종 보호·교육시설, 섬·갯벌 생태 가치 전시관, 육·해상 생태탐방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업 대상지인 보성·순천 일대 여자만 갯벌(59.85㎢)은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곳으로 국내 최대 염습지를 품고 있다.

염습지는 조석에 따라 바닷물이 드나들어 염분 변화가 큰 해안 습지로 염생식물이 밀집해 생태계 안정과 탄소 저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이 곳은 흑두루미, 붉은발말뚝개 등 멸종위기 생물의 주요 서식지이자 수백 년간 지역민이 바다와 공존해온 생태·문화적 보고로도 꼽히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전례가 없는 대규모 국가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정부의 예타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자만은 그동안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 서식지 파괴, 지역개발 갈등, 수산자원 고갈 및 어촌 인구 감소 등 각종 문제점이 불거졌다.

전남도는 지난 2019년부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 때부터 수십 차례 중앙부처와 협의하며 계획의 구체성과 경제성을 보완해왔고, 생물 다양성과 생태 복원, 지역 상생효과 등을 고려해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정부, 순천시, 보성군과 긴밀히 협력해 반드시 예타를 통과시켜 이곳을 세계적 해양생태 체험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가을 명소’ 함평군 추억공작소를 아시나요

함평군 엑스포공원에 자리한 추억공작소가 인기다.

디오라마 기법을 활용해 1960~1980년대 함평의 생활상을 생동감 있게 재현해 세대를 아우르는 감성과 이야기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 기법은 축소모형과 배경 등 3차원으로 구현된 미니어처 장면으로 관람객이 실제 장면 속에 들어온 듯한 몰입감을 주는 전시 기법을 말한다.

이 곳에는 옛 함평국민학교 교실, 다방, 슈퍼마켓, 책방, 극장, 이발관, 대포집 등 그 시절의 추억이 돋는 생활공간 20여개가 그대로 복원돼 있다. 당시 실제 사용됐던 생활용품과 소품이 함께 전시돼 중증년층에게는 향수를, 청소년에게는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또 세나라 학생사에서 옛날 상품을 직접 구매하거나 다방에서 차 마시기 체험도 가능하다. 세대 간 공감과 대화의 장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시장 입구에 있는 함평의 상징인 황금박쥐전시관은 함평의 자연과 생태의 소중함을 알리는 공간이 되고 있다.

중앙에 자리한 황금박쥐상은 함평군 대동면 고산봉 일대에서 국내 첫 집단서식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붉은박쥐’를 기념해 지난 2008년 제작됐다. 당시 순급 162kg과 은 281kg 등 재료값만 28억3000만원을 투입해 전면 5마리, 후면 1마리 등 총 6마리의 황금박쥐를 표현했다.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 안전자산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금값이 고공행진, 지난달 말 현재 재산가치가 약 321억5900만원으로 평가돼 ‘함평의 비트코인’으로 불리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 한다.

과거 축제 기간에만 공개되다 지난해 함평·나비대축제부터 이곳으로 이전돼 상시 관람이 가능해져 엑스포공원의 상설 개방과 함께 함평의 대표 생태 상징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황금박쥐를 모티브로 한 함평군 관광 캐릭터 ‘황박이’도 전시관 앞 팝업스토어에서 키링, 머그컵, 쿠션 등 다양한 기념품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가을축제의 대명사 대한민국 국화대전이 ‘마법의 국화랜드’라는 주제로 오는 9일까지 함평 엑스포 공원 일원에서 열리고 있다고 한다.

없는 시간을 내서라도 이곳을 찾아 국화향 향기와 옛 추억에 젖어들며 어느해보다 ‘짧아진 가을’을 만끽해 보는 것은 어떨까.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부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ыл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